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36년 묵은 숙제 풀리나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한 각계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개헌으로 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범종,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정사와 한국 민주주의에 획을 그은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켜 5·18 정신을 헌법규범화하자는 게 요지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처음 거론된 때는 1987년이다. 6월 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 이뤄질 당시 야당 통일민주당이 내놓은 헌법개정 시안에 처음 등장한다.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 군인의 정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문민정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제시됐으나,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

있고 대통령 발의로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급부상했으나 임기 5년 내 국민적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렇다할 힘을 쓰질 못했다.

다시 찾아온 2022년 대선, 여야 유력 후보들은 너나 없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기념식에서 이를 제차 공식화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6년 묵은 숙제인 5·18 헌법 전문 수록은 5·18 43주년을 맞아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정치권은 명쾌한 응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받고 있다.

“5·18 정신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뿌리 내리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다”는 주장에서 “헌법 수록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까지 각계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후 9차 개헌 때 야당이 헌법 개정 시안 제시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진 뒤 36년 간 헛돌아

서 ‘5·18 계승’ 부분이 빠지면서 유아무야했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학계, 5월 단체와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됐으나 ‘개헌의 벽’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녹록찮은 법적 절차에 정치적 갈등구도까지 발목을 잡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안종철 부위원장은 당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항쟁”이라며 “더 늦기 전에 헌법 전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수록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촛불혁명’으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5·18 묘지 참배 후 “원포인트든, 대폭 개헌이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개헌안에 빨리 합의할 수 있다면, 그 개헌에 5·18 정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정치권 합의를 촉구했다.

17일 퇴임 후 처음으로 5·18묘지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5·18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우리 정치권이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취임 후 첫 5·18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범조인 출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5월을 맞아 대선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선언할지, 어떤 로드맵을 제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용일기자



고 문재학 열사 참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가 고 문재학 열사를 참배하고 있다.

문재인, 퇴임 이후 5·18묘지 첫 참배...전 대통령 6번째

퇴임 후 첫 광주행...역대 3명뿐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오월영령에 참배했다.

17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퇴임 이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전직 대통령은 3명이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날 참배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다.

고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4년 연속 민주묘지를 찾았다.

퇴임 이듬해인 2004년 11월 1일 고 김 전 대통령은 부인 고 이희호 여사와 함께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했다. 퇴임 대통령으로서 최초였다.

이후 10개월 만인 2005년 9월 5일에도 부부 내외가 함께 참배했다. 당시 방문목에는 ‘추모 5·18 민주영령’이라고 적었다.

2006년 6월 16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전 대통령 등 역대 노벨수상자들과 함께 참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 2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생전 마지막으로 민주묘지를 찾아 열사들을 참배했다.

고 노 전 대통령도 퇴임 이듬해인 2008년 4월 20일 1차례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5·18민주묘지 1·2묘역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 직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에 크게 빛났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 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재임 중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무산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우리 정치권이 같이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이슬비기자

전우원 “민주주의 헌신 영령 기리는 날 되길”

5·18 학살과 헌정 질서 파괴 주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5·18민주화운동 제43주기를 하루 앞두고 광주를 찾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영령들이 각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유족회의 추모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 씨는 “항상 갖고 있던 죄의식에 따른 사과를 하기 위해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이 추모식을 통해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가 지난달 30일 전씨에게 보낸 문자 일부인 ‘할아버지에 먹칠한 손자’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다”며 “어떠한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더 각광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자연이 주는 기쁨
 자연이 주는 기쁨
 자연이 주는 기쁨